정책-04-2021-0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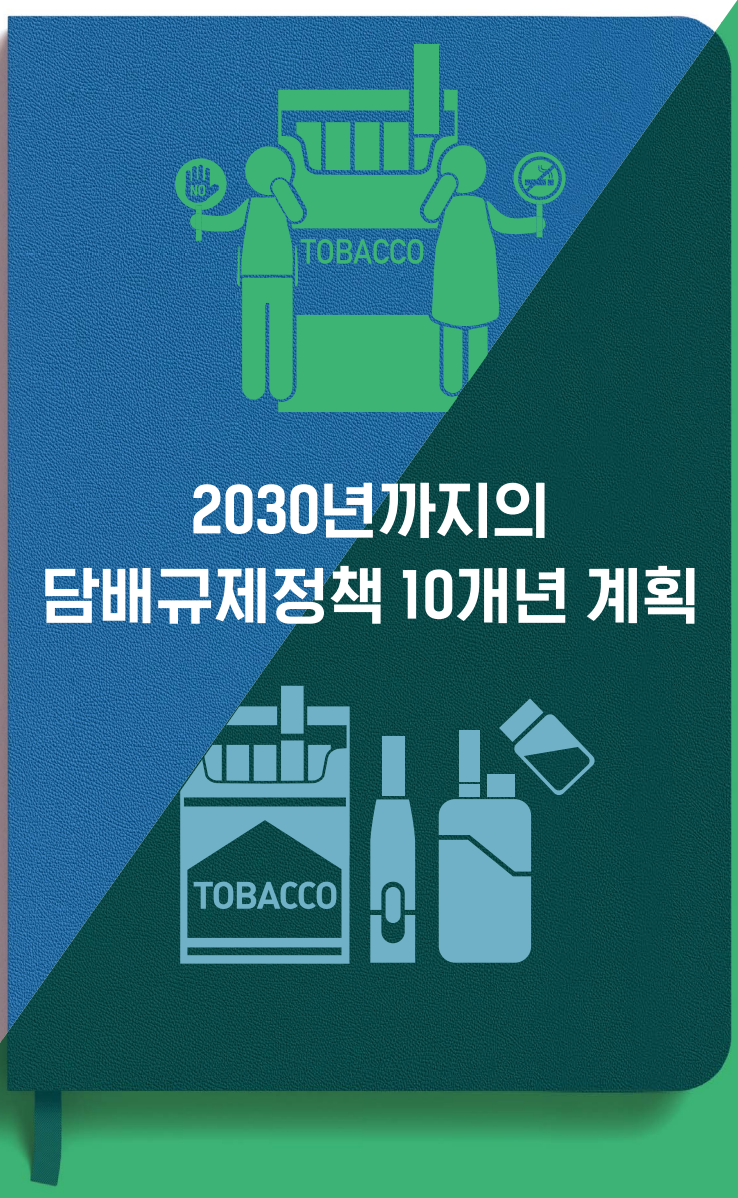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연 이슈&포럼

TOBACCO CONTROL
ISSUE & FORUM

[이슈]

HP2030,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포럼]

신속한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과 흡연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 확보 필요

WEBZINE
2021 Vol. 79

목차

ISSUE

06 **인포그래픽** **이슈 분석**
HP2030, 담배규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16 **금연 Talk 지식 In**
담배규제정책,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 **동향 분석**
국외 정책 및 연구 동향

FORUM

논설 2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추진 방향

INFOGRAPHIC NO. 79

모션그래픽 바로가기

HP2030, 담배규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HP2030이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국가 차원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No TOBACCO

담배규제 강화와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Well Life

추진계획 1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추진계획 2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로 관리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 추적시스템 도입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건강경고 면적 50% → 75%
(경고그림 면적 30% → 55%)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Plain Packaging)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가격

중장기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적정성 검토

성분 공개

담배 및 담배 배출물 성분제출 공개 의무화

금연구역 확대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추진계획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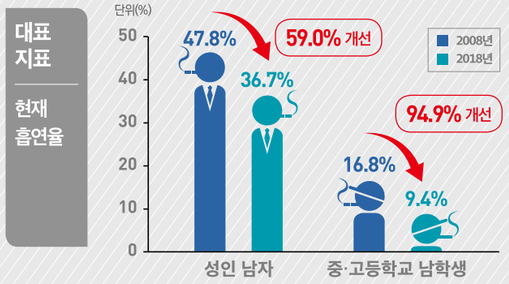
미래 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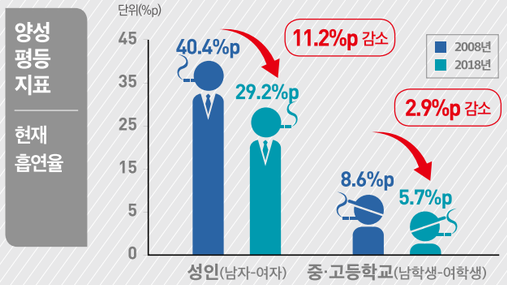
참여형·체험형 흡연예방교육 확대

금연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업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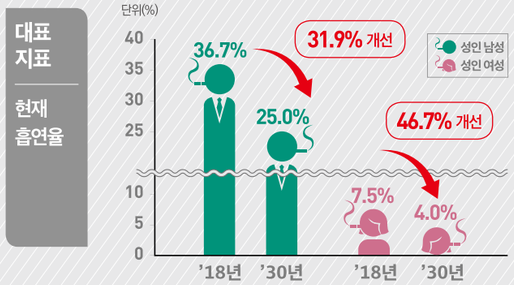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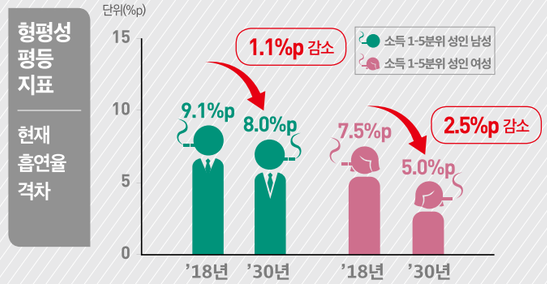
[HP2020 '금연' 중점과제 대표지표별 목표달성 현황]





[HP2030 '금연' 중점과제 대표지표별 목표치]





ISSUE

1

[이슈 분석]

HP2030, 담배규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국가 건강증진전략 도출 및 건강증진정책 개발의 근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제5차 HP2030은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금연'은 가장 첫 번째 중점과제이며, 담배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청년의 담배사용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추진계획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종합대책,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이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던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2030년까지 또 어떻게 도약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어떻게 발전해 왔나?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소비 감소에 목적을 둔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4년에 수립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아우르는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달성을 위한 적극적 비가격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포함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70%에 육박하던 성인남성흡연율은 30% 후반대로 줄어들게 되었고,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2019년 5월, 새로이 마련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령, 대책에 더하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HP2030)에서도 담배규제를 위한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담배규제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수립된 제5차 HP2030은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금연'은 그중 가장 첫 번째 중점과제이며, 담배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청년의 담배사용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그간의 법령과 대책에 HP2030이 어우러져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1, 2]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은 최근 10년 내에 담뱃값 인상을 비롯하여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WHO FCTC에서 요구하는 정책의 이행 수준이 미진한 분야들이 있다.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현주소와 HP2030에서의 담배규제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HP2030의 '금연' 중점과제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추진계획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은 니코틴이나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담배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 모든 담배(유사 제품 포함)는 건강위험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의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추진계획은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이다. 그중에서도 가격 정책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89년 궐련 한 갑당 360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 이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담뱃세도 지속적인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담배가격도 담뱃세에 따라 인상되었다. 가장 최근의 담배가격 인상은 2015년 1월에 이루어져 한 갑당 평균 담배가격이 4,500원을 유지하고 있다.[3] 이후 가격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흡하여 추가적인 담배가격 인상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 대비 담배가격이 2019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2위로 낮은 편에 속하며, 담배소비 억제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 등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1. 관계부처합동. (2021. 1. 27.).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2. 보건복지부. (2019. 5.).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담배 없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표] OECD 국가별 담배가격 흡연율

구분		담배가격[1]			흡연율(%)[2]			
		USD	원 (1$=1,119.4원)	기준연도	전체	남성	여성	기준연도
1	뉴질랜드	16.31	18,257	2018	13.1	14.3	12.6	2018
2	호주	15.42	17,261	2018	12.4	14.0	10.8	2016
3	노르웨이	14.51	16,242	2018	12.0	12.0	10.0	2018
4	아일랜드	14.32	16,030	2018	17.0	19.0	15.0	2018
5	아이슬란드	12.98	14,530	2018	8.6	8.1	9.1	2018
6	영국	12.37	13,847	2018	17.2	19.1	15.5	2017
7	이스라엘	9.83	11,004	2018	16.9	21.3	12.8	2017
8	프랑스	9.39	10,511	2018	25.4	28.2	22.9	2018
9	캐나다	9.07	10,153	2018	12.0	14.2	10.0	2017
10	스위스	8.71	9,750	2018	19.1	21.5	16.8	2017
11	핀란드	8.47	9,481	2018	14.0	15.0	13.0	2018
12	네덜란드	8.22	9,201	2018	16.8	19.5	14.1	2017
13	벨기에	7.75	8,675	2018	18.9	21.6	16.4	2013
14	독일	7.51	8,407	2018	18.8	22.3	15.3	2017
15	스웨덴	7.44	8,328	2018	10.4	10.5	10.3	2017
16	덴마크	7.01	7,847	2018	16.9	18.5	15.4	2017
17	미국	6.86	7,679	2018	10.5	11.5	9.5	2017
18	오스트리아	6.45	7,220	2018	24.3	26.5	22.1	2014
19	이탈리아	6.45	7,220	2018	19.9	25.1	15.0	2017
20	룩셈부르크	6.22	6,963	2018	14.5	15.7	13.4	2018
21	포르투갈	5.87	6,571	2018	16.8	23.5	10.9	2014
22	스페인	5.87	6,571	2018	22.1	25.6	18.8	2017
23	그리스	5.40	6,045	2018	27.3	33.8	21.4	2014
24	에스토니아	4.99	5,586	2018	17.2	23.4	12.9	2018
25	헝가리	4.54	5,082	2018	25.8	31.6	20.8	2014
26	리투아니아	4.40	4,925	2018	20.3	33.9	9.2	2014
27	슬로베니아	4.34	4,858	2018	18.9	21.8	16.0	2014
28	체코	4.31	4,825	2018	18.4	22.6	14.5	2017
29	폴란드	4.25	4,757	2018	22.7	28.8	17.2	2014
30	칠레	4.23	4,735	2018	24.5	28.2	20.9	2016
31	라트비아	4.11	4,601	2018	24.1	36.0	14.5	2014
32	**한국**	**4.02**	**4,500**	**2018**	**17.5**	**31.6**	**3.5**	**2017**
33	일본	3.97	4,444	2018	17.7	29.4	7.2	2017

구분		담배가격[1]			흡연율(%)[2]			
		USD	원 (1$=1,119.4원)	기준연도	전체	남성	여성	기준연도
34	슬로바키아	3.87	4,332	2018	22.9	30.4	15.8	2014
35	터키	2.76	3,090	2018	26.5	40.1	13.3	2016
36	멕시코	2.70	3,022	2018	7.6	12.0	3.6	2017

* 주 1) WHO 2019
2) OECD Health Statistics 2019

다음은 비가격 정책이다. WHO FCTC 가이드라인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담배 성분 및 담배제품 배출물에 관해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HP2030에는 담배 및 담배 배출물의 성분을 제출·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며,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담배로 관리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WHO 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제품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의 사용, 즉 담배에 가향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단지 이러한 성분이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가향담배로 인해 비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4] 가향물질 규제와 더불어 담배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담배 불법거래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오고 있고, 2012년 0.41%에서 2017년 0.93%로 전체 담배 밀수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 및 국가 간 담배 이동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5] 또한, 건강 위해성 검토를 위한 담배 성분과 배출물 공개를 의무화하고, 흡연을 시작·지속하게 하는 물질인 담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담배 소비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정책이다. WHO FCTC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으로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여 담뱃갑 면적의 50%(그림 30% + 문구 20%)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3기 경고그림과 문구를 시행 중('20. 12. 23.~'22. 12. 22.)에 있으며, 제4기 경고그림과 문구의 시행('22. 12. 23.~'24. 12. 22.)을 준비하고 있다.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9). 담배시장과 함께 진화하는 가향담배와 규제 정책의 현주소.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71호.
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9).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서울 의정서".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65호.

제3기 경고그림은 총 12종(궐련류 10종,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각 1종)으로, 9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고, 3종은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경고문구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6] WHO FCTC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50% 이상에 건강경고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나아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Plain Packaging)의 도입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고*,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뒤집어 진열하는 등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로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담뱃갑이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7] 이는 2030년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경고그림 면적 : OECD 경고그림 도입 34개국 중 우리나라 31위(앞뒷면 평균 면적 기준)

비가격 정책 중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광고는 대부분의 인쇄매체로 품종군별 연 10회 안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담배소매점 내에서의 광고도 가능하다. 또한, 담배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 제공 등의 판촉행위는 금지하나, 제조사·소매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촉하는 행위는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신종담배의 출현과 함께 통신매체, 뉴미디어의 발달로 담배회사의 담배광고·판촉 활동 등이 점점 다양하고 우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장면과 담배제품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흡연자 창출을 위해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 등이 활발해지고 있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다. WHO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따르면 신종 담배제품 사용을 위해 고안된 기기장치에도 FCTC 조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흡연 전용기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판촉은 물론, 경고그림 표기 의무 또한 적용받지 않고 있다. WHO FCTC 가이드라인 제13조는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흡연자이지만 무의식적으로 담배광고에 노출된 경우, 담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어렵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담배와 흡연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4. 13.).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
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20).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제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78호.

행위가 친숙하게 인식되어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배광고·판촉·후원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2030년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간접흡연 폐해 방지 정책이다. WHO FCTC는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과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 확대 추진 중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제도 도입, 거리·버스정류장·지하철역 출입구 등 실외 공공장소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연구역의 증가에 비해 지정된 실외 흡연 가능 공간이 적어 길거리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및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다. 2019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금연구역 정책 현황에 대한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조치의 경우 WHO 총 195개국 중 62개국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금연이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작업장이나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2개 이하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에 해당된다. 결정적으로 WHO에서 말하는 완벽한 금연구역은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매우 엄격한 시설 규격을 따르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시설과 교육시설 외에는 예외적으로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어 있어 WHO 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8] 이에,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서의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이 HP2030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진계획은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이다. 담배제품 사용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신규 흡연자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담배제품 사용 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에 맞추어 유아·아동(어린이집·유치원), 청소년(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담배의 지속적인 출시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이 담배사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형·체험형 흡연예방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9). 우리나라 MPOWER 이행 현황.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70호.

담배사용자를 대상으로는 담배사용 정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배사용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군·의경 대상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 금연치료와 금연캠프를 통해 중증 고도흡연자에 대한 전문적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분야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의 금연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 병의원 금연치료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금연치료약물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강화된 점 등을 인정받아 최고 수준의 정책 이행 국가로 평가되었다.[8] 그러나 지난 2005년 이후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금연지원서비스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2030년까지 금연지원서비스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의 연계 활성화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의 확대 등 금연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계획이 HP2030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10년, 담배규제정책 도약을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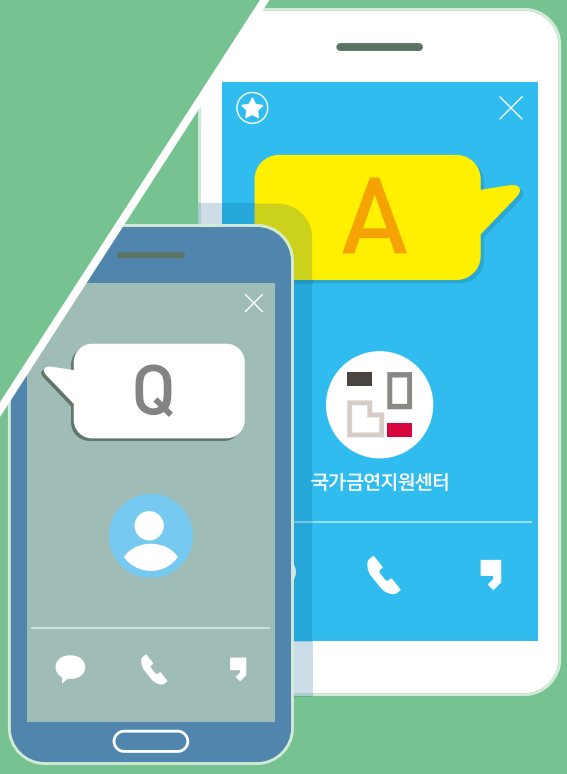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2030년까지 총 10년에 걸친 추진계획이다. 그중 금연 중점과제와 관련해서는 담배규제 강화와 청소년·청년의 담배사용 적극 차단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되었다. 10개년 중 첫해인 올해부터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 개정 노력 등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담배 등의 판촉행위 금지, 금연구역 확대, 흡연전용기구에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등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담배 정의 변경, 성분규제 등과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비롯하여 HP2030에 따른 담배규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ISSUE

2

[금연 Talk 지식 In]

담배규제정책,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금연 Talk 지식 In |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금연' 중점과제에는 담배 정의 확대, 모든 건축물에서의 실내 흡연 금지 등과 같은 한층 강화된 담배규제정책 추진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가상의 국민대표 3인과 Q&A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대국민 금연 소통방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국민대표 **<금연 작심삼일(현재흡연자)>**, **<지금은 금연 중(금연 1년 차)>**, **<주부 9단>**을 초대했습니다.

담배규제정책,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국가금연
지원센터

금연 작심삼일

요즘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한 필름이 부착되어 있던데,
그게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동과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담배광고에 노출되는 것과
담배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소매점 담배광고 외부노출 차단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는 청소년의 흡연시도와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금연
지원센터

향후에는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노출 보관 금지, 담배 광고 금지 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연 중

추진계획을 보니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국가금연 지원센터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즉,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제조된 경우 사실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모든 부분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제품과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된다면, 기존 담배에 적용하던 규제를 모두 적용하여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부 9단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복도나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소유 주택의 실내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금연 지원센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 중입니다.

국가금연 지원센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및 스티커를 부착하며 여기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금연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금연두드림 자료실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금연 지원센터

 #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클릭 시 **금연두드림**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

또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30)

클릭 시 **금연두드림**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

ISSUE

3

[동향 분석]

국외 정책 및 연구 동향

국외 정책 동향

01 정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2021. 2. 3., 암 퇴치 계획 발표[1]

- 암 퇴치 계획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암 예방을 통한 생명 구조'이며,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담배규제'를 포함
  - 전체 암의 27%가 담배사용에 기인하는데, 담배소비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 계획에는 '담배 없는 유럽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전체 인구의 25%가 담배사용자인 것과 비교하여 2040년까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담배를 사용하는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암 퇴치 계획을 통해 EU 회원국 간의 WHO FCTC 이행을 개선하고 담배과세, 신종담배규제 강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 시행 및 가향물질 첨가 전면 금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2023년까지 위원회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와 같은 새로운 제품까지 확장하고, 금연환경을 확대할 것을 제안할 계획임

02 정책 네덜란드, 2020. 1. 10.부터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Plain Packaging) 제도 시행[2]

- 궐련과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의 경우 특정 로고, 색상 및 서체를 사용하는 대신 로고가 없는 짙은 녹갈색 포장으로, 표준 서체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름 및 제품명과 건강경고(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 소매 업체는 1년 동안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으나, 신제품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적용
- 시가 및 전자담배와 같은 다른 담배제품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적용

1.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1. 2. 12.). Europe's Beating Cancer Plan. https://untobaccocontrol.org/impldb/europes-beating-cancer-plan/
2.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20. 10. 1.). The Netherlands: Implementation of plain packaging from 01/10/2020. https://untobaccocontrol.org/impldb/the-netherlands-implementation-of-plain-packaging-from-01-10-2020/

국외 연구 동향

01 연구 덴마크 일반 인구의 향후 흡연 금지 및 세금 인상에 대한 지지의 변화[3]

- 향후 흡연 금지에 대한 지지는 '13년 30.6%에서 '17년 50.3%로 증가, 담뱃세 인상 지지는 '13년 59.0%에서 '17년 59.2%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음. 비흡연자의 향후 흡연 금지에 대한 지지는 흡연자에 비해 '13년에는 2.63배 높았고, '17년에는 5.13배 높았음
  - 덴마크의 향후 흡연 금지 및 담뱃세 인상에 대한 지지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화가 성별, 연령, 학력, 흡연 상태 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함
  - '13년과 '17년에 실시된 '덴마크 수도권 건강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연구 샘플은 16세 이상의 시민 96,521명임
  - 연구는 향후 흡연 금지 및 담뱃세 인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냄. 향후 흡연 금지에 대한 지지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13년에 비해 '17년에 증가함. 특히, '13년과 '17년 모두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향후 흡연 금지와 담뱃세 인상을 지지한 결과는 담배 종결전(Tobacco Endgame) 전략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02 연구 중·고등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 제한이 담배광고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시뮬레이션[4]

- 학교에서 약 305m(1,000ft, n=21, 담배광고 개수 평균 = 59.9개)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은 약 305~610m (1,000~2,000ft, n=66, 담배광고 개수 평균 = 44.4개)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담배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담배 소매점에서 많은 담배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학교에서 약 305m 이내에 담배 소매점 위치 금지 또는 이러한 매장 내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임

3. Cecilie Goltermann Toxværd et al., (2021). Making smoking history: temporal changes in support for a future smoking ban and increasing tax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Denmark. Tob Control 2021;0:1–5. http://dx.doi.org/10.1136/tobaccocontrol-2020-056067
4. Udoka Obinwa et al., (2020). A Simul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f restricting tobacco retail outlets around middle and high schools on tobacco advertisements. Tobacco control. 2020;0:1–7. http://dx.doi.org/10.1136/tobaccocontrol-2020-055724

FORUM

【논설】

제5차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과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추진 방향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추진 방향

- 신속한 담배규제정책의 이행과 흡연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 수단 확보 필요 -

김길용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담배의 직접 사용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약 6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다.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며, 장애보정생존연수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질병부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인구집단 수준에서 담배의 규제와 담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담배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은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명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증진(Good Health and Well-Being)의 달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WHO FCTC)에 따라 담배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정부는 올해 1월 수립하여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이하 HP2030)을 통해 2030년까지 흡연율을 지속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흡연불평등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총 36개의 세부 목표(성과지표)를 수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은 2008년 47.8%에서 2019년 35.7%로,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은 2008년 7.4%에서 2019년 5.9%로 감소하였으며,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은 25.0%까지, 여성은 4.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정책 및 규제 강화,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가 제시되었다.

| 논설 |

HP2030에서 제시된 정책 수단과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흡연율의 감소효과가 입증된 WHO FCTC의 6가지 핵심 담배규제정책 수단(MPOWER)의 완전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WHO FCTC 비준 이후 2015년 담배가격 80% 인상,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실내 금연구역의 확대, 매스미디어를 통한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정책이 WHO FCTC가 제시하는 완전 이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 지표인 성인 남성흡연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평균 1%p 이상의 흡연율 감소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예외 없는 전면금연 실시,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금지,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및 문구 크기의 확대, 담배성분 공개,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 이행 등 WHO FCTC의 각 조항별 관련 정책의 100%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시기와 일정을 수립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HP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두 번째 고려사항은 기존의 가격 및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이 흡연불평등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흡연불평등의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적절한 정책 수단의 확보를 위해서는 흡연율뿐 아니라 간접흡연의 노출 수준, 금연에 대한 의지와 성공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인구집단별 정책 효과의 평가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세 인상 정책은 소득계층 간의 흡연율 격차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사망률을 고소득층보다 더 감소시킴으로써 건강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금지 정책과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 또한 흡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검증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인구집단의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입증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주요한 비가격 정책 또한 인구집단의 특성별로 정책 효과의 크기를 평가하고, 흡연불평등을 감소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종담배의 확산에 따른 담배제품의 다중 사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흡연행태의 변화 또한 흡연불평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HP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흡연율의 감소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담배규제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흡연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담배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정부, 전문가, 학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불법 담배 판매, 광고를 신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①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담배는 우편거래, 전자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④ 담배는 인터넷으로 광고, 판촉할 수 없습니다.

⑤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신고 방법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 '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배너 클릭 - 신고하기

[금연이슈&포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alth.or.kr/nsk

구독 신청

nsk@khealth.or.kr

금연이슈&포럼 Vol.79

발간종류	정책보고서
관리번호	정책-04-2021-015-08
등록일	2021년 7월
발행일	2021년 7월
발행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기획·총괄	김수영, 김길용
구성·집필	박은희, 공재형, 김길용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전화번호	02-3781-2209
홈페이지	www.khealth.or.kr / nsk.khealth.or.kr
디자인, 인쇄	디자인멘토 / 02-2275-3040

금연 이슈&포럼

TOBACCO CONTROL
ISSUE & FORUM

2021 Vol. 7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11
9 772734 105009
ISSN 2734-1054